

별 첨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2023. 9. 14.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목 차

I.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1. 지방의 도전과제

2.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II. 지방시대 추진 전략

1.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2. 지방시대 9대 정책

III.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I. 지방시대로의 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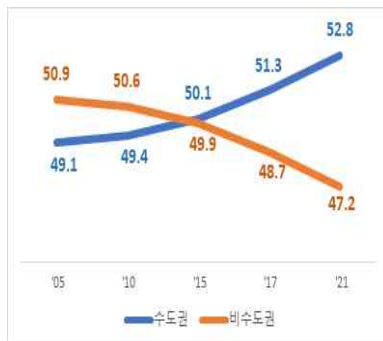
1 지방의 도전과제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감소의 현주소 】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 (생산) 수도권-비수도권 GRDP 격차 확대('10년 $\Delta 1.2\%p \rightarrow$ '21년 $5.6\%p$)
- (고용)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집중('21년 기준)
- (기업)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22년 기준)
- (인구)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22년 기준)

<GRDP 비중(%) 변화>



<일자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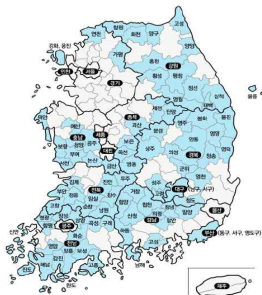
<인구 비중(%) 변화>



□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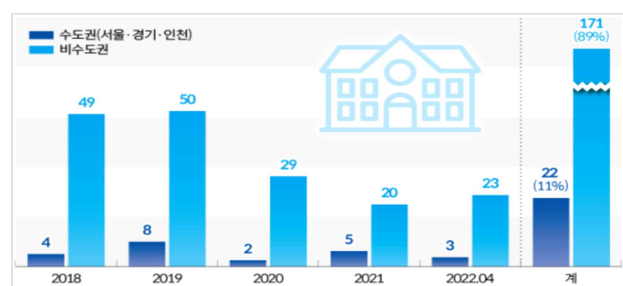
- 저출생, 초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
- 인구감소,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 유출의 악순환 반복으로 국가 전체의 인구 위기 초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2021)

<전국 초·중고 폐교 현황>



자료 : 국회 교육위원회(2022)

1.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한계

□ (중앙정부 주도형 균형발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는 지방의 생활여건·발전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에 어려움

○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정책추진 방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정책 기획역량 제고 및 지역 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에 제약

* ▲중앙정부가 개발·수혜·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공모(예시: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역 주력산업, 성장촉진지역),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 주요 기능도 중앙정부에 집중

○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고보조금 지방비 분담도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지방 발전을 위한 자체 재원확충에 한계

* 재정자립도('23, %) : 서울 81.2 vs 전북 27.9, 전남 28.7, 광주 46.2, 대전 46.4

□ (다변화된 행정수요) 사회의 복잡화·세분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필요

○ 지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단이 중앙에 집중되어 지역 수요에 적시 대응하는데 한계

○ 전국적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인구증감·출산율 등에 차이*가 있어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별적 정책대응 필요

* '00년 이후 지방인구의 수도권 순유출 추세에도 충남·충북·세종·제주 순유입 지속

* 동일 시·도 내에서도 출산율에 차이('22년 시군별 합계 출산율) : 전남 영광 1.80 vs 곡성 0.54 / 경북 군위 1.49 vs 영양 0.70 / 경기 연천 1.04 vs 동두천 0.75

○ 의료*·문화**시설 지원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의 적시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 필요

* 시·도별 의료접근성(km) : 서울 2.85 vs 광주 6.04, 부산·대전 6.80, 강원 30.47, 경남 31.54

** 권역별 공연 건수('21, 공연예술조사) : 서울 8,162건, 충청권 2,428건, 강원도 732건

2. 지방경제 체질 약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역량 저하

- (지방경제 활력 저하)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성장 고착화*로 지방경제의 활력저하 심화

* 연평균 잠재성장률(% , 한은) : ('11~'15) 3.1~3.2 → ('16~'20) 2.5~2.7 → (최근) 2.0내외

- 지방에 밀집된 제조업 위주 전통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이 둔화**되면서 지방산업의 경쟁력 약화

* 전국 대비 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중(%) : ('10)51.6 → ('15)49.9 → ('20)47.5

** 제조업 생산지수 성장률('10~'22, %) : 수도권 5.45, 대경권 △1.49, 동남권△0.39

- 지방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더딘 회복세*

* '20~'21년 성장률(%) : 서울 2.2, 경기 3.7 vs 부산 △0.6, 울산 △1.6, 경남 △1.8

- 기업본사*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고 R&D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혁신역량 격차 심화

* 100대 기업 본사의 86%('22),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위치('21), 상용근로자 수도권 비중 53.7%('20)

** 수도권 비중('21, %) : R&D 투자 69.8, 100억↑투자받은 스타트업 92.5, 매출 천억 벤처수 62.6

-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이 지방의 新성장동력 확보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DX(디지털 전환) 핵심기술 기업(%) : 서울 40.2, 경기 31.8 vs 부산 3.3, 대구 2.3, 경남 2.6

**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16對'20) : 수도권 22.5%(4%p ↑) > 지방 14.1%(2.7%p ↑)

-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전통 제조업*이 비수도권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미래 성장성도 불투명한 상황

*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21, %) : 전남 24.6, 충남 20.0, 울산 12.5, 서울 0.5

3. 교육과 정주여건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의 유출 심화

□ (교육·정주여건 격차 확대) 교육·정주 환경의 격차 심화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

○ 지방의 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높음*에도 수도권 중심의 보육** 및 초·중등 교육 여건으로 지방의 인구 유출 지속 확대

* 출산율('22) : 서울 0.59, 인천 0.75, 경기 0.84 vs 세종 1.12, 전남/강원 0.97, 경북 0.93

** 국·공립 보육기관 연평균 증가율('10~'21) : 수도권 8.8% vs 지방 5.9%

○ 수도권과의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 해소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

* 초·중·고 폐교 현황('18~'22.4) : 수도권 22개교(11%) vs 지방 171개교(89%)

** 지방 주민은 일자리(48.6%), 문화·여가 시설·서비스(48.4%), 교육 시설·서비스(35.4%) 등에서 불평등 체감('지역불평등 국민 인식조사'('21, 국토연·한국리서치))

- 1개 시·도당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분포 현황('22, 문화기반시설 총량) : 수도권 382.7개 vs 14개 시·도 142.4개

□ (지방인재 육성) 지방에서 육성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혁신창출 선순환 구조 취약

○ 지방대학 출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속*되면서 인력난 및 지역 혁신역량 저하 등 악순환 확대

* 지방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21, 교육개발원) : 강원 58.0%, 대전·세종·충남 54.5%, 광주·호남·제주 29.2%, 대구·부산·울산·경상 27.8%

* 지방청년 수도권 유입 사유('21, 보사연) : (10~20대 초) "교육" → (20대 중반 이후) "직업"

○ 지방정부 발전전략과 지방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생태계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

▶ [2023년 신년사]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2023년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교육은 나라 살리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1.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유기적 연계·통합

- (기능 재정립) 지방 주도로 지역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중앙-지방 간 상생적 협력관계 확립 필요
 - 사무 재배분과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기능 재정립
 - 자치재정권 확보와 중앙-지방 간 수평적 분담체계 정립을 통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주민의 행정수요 다양화에 대응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모델]

- ❖ (작고 민첩한 중앙정부)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가능한 민첩하고 강한 중앙정부, 자율과 혁신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방정부 ⇒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국가
- ❖ (중앙-지방 간 대등한 협력관계) 중앙-지방 간 기능 재정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호혜적·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분권형 국가체제로 전환
- ❖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 지방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성, 지방행정의 효율성, 계획 수립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대폭 강화

- (지역 맞춤형 균형발전) 지역별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산업 구조, 공간·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으로 혁신역량 극대화 추진
 -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자율성, 책임성, 다양성, 창의성 기반의 균형발전 구현
 - * 예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 지방 주도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생태계 조성,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 활용하여 로컬 문화·콘텐츠 활성화
 - 중앙정부는 지역별 특수성과 행정·재정 수요를 고려한 차등적 분권 전략 수립 및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방의 자율적 발전토대 조성
 - * 예시) 지방투자 활성화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인재 양성 위한 '교육자유 특구' 도입, 민간투자 장애 제거를 위한 '지방 킬러규제 발굴 및 일괄해소' 추진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량을 연대·결집하여 산업·문화·관광 등 분야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

2. 지방시대의 '뉴 거버넌스' 제도화

① 통합 특별법 발효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 (추진체계) 통합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23.7.10.)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
 - 법령 및 대통령직속 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과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연계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지방시대]
(근거법)	「지방분권법」	+ 「국가균형발전법」	⇒	<u>「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u>
(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u>지방시대위원회</u>

-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정책과제(지방공약) 이행지원 총괄

* [국가균형발전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후 국가균형발전위가 심의·의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 지방시대위가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국정과제 111 ~ 120)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

- (재정지원) 예산안 편성지침에 지방시대위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하여, 예산요구단계부터 지방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화

* 기재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장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84)

- 지역의 자율적인 예산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특회계 자율 편성 사업을 확대하고 타 회계·기금의 지특회계 이관을 적극 추진

* 시·도 자율편성 대상사업 확대 (24 → 37개, 13개 ↑)

- (정책 연속성 강화) 기획(지방시대 종합계획)-집행(지역사업)-평가(지특 및 지역사업 평가) 연계 강화로 사업성과 제고 및 책임성 강화

② 지방정부 주도성 강화 및 위상 제고

-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로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을 정례화하여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 강화

* 3회 개최 : 2회('22.10.7, 울산), 3회('23.2.10, 전주), 4회('23.4.6, 부산)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습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2.10.7]

- 지방시대 정책 점검결과를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 회의에도 보고하여 지방에서도 정책 추진상황 확인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2조 ②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지방시대위 심의·의결사항, 지방시대 정책 추진사항)의 점검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지방4대협의체) 지방시대위 당연직위원으로 지방4대 협의체장을 모두 포함*하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

* [균형위] ①시·도지사협의회/②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자치분권위] 미포함
⇒ [지방시대위] ③시·도의회의장협의회/④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 추가

- (사도 지방시대위) 시·도 및 시군구에도 지방시대위를 설치하여 지자체의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심의(사·도)/협의·조정(시군구) 수행

-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舊)지역혁신협의회와 (舊)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합
- 시·도지사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의 중요성 강조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4) → 부문별 발전계획안(§5) → 시·도 발전계획(§7)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시대 종합계획(§6) → 시·도 지방시대 계획(§7) → 부문별 계획(§8)

Ⅱ. 지방시대 추진 전략

1 지방시대 전략과 가치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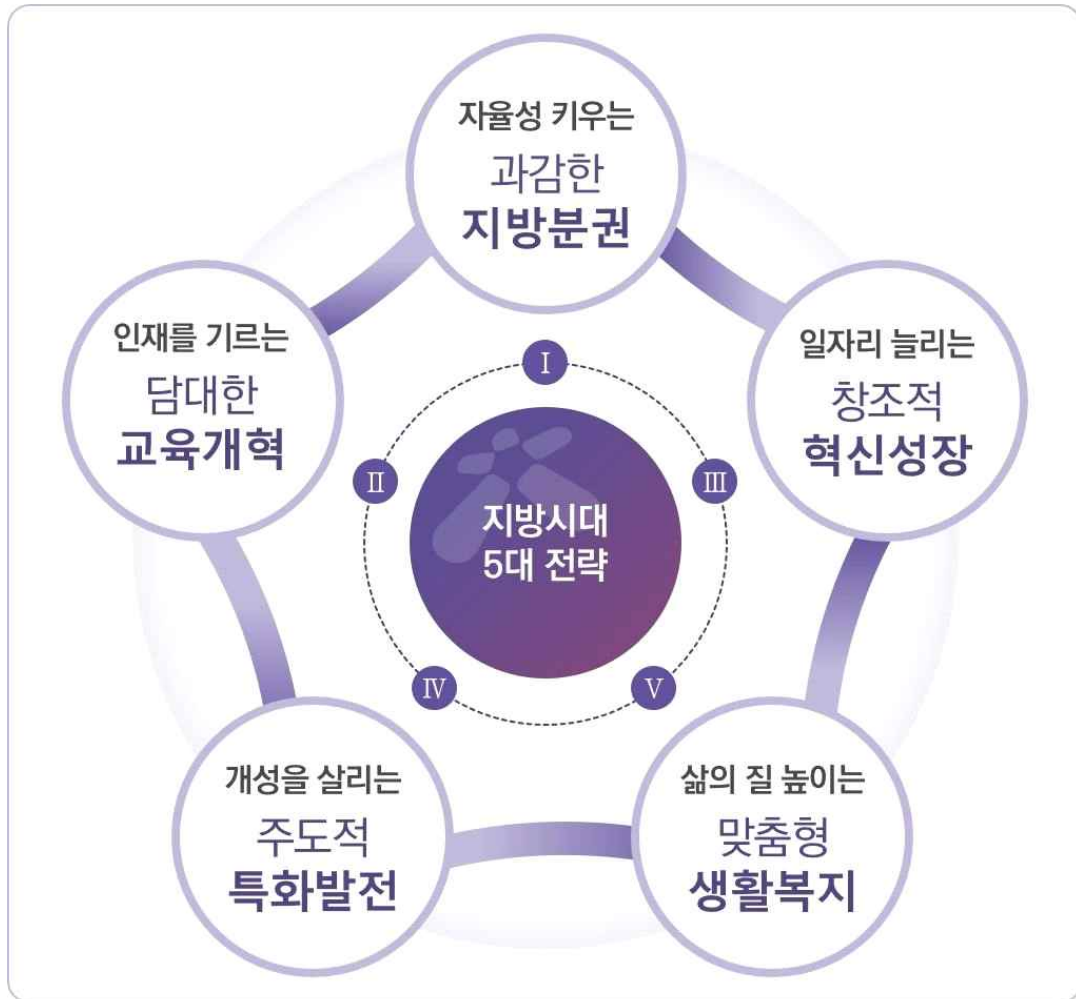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자율

공정

연대

희망



지방시대 4대 가치

자율

지방 고유의 가치를 활용하여
자치발전의 기반 확보

공정

혁신 역량을 토대로 지방주민의
균형잡힌 삶의 질 향상

연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희망

지방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희망찬 지방시대 추진

2 지방시대 9대 정책

1.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인 인구 및 지역총생산량의 과반 차지 ■ 1,000대 기업의 87%가 수도권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으로 지방인구 유입 촉진

□ (지방주도)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新특구

- 산업 육성전략, 지원계획, 기업의 투자계획·집적성 및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주도 하에 계획 수립
 - *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방정부가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고시로 지정
- 시행령 아닌 조례중심의 법 체계로 지역별 특구 면적 총량* 내에서 지방정부에 운영상의 자율성(시·도 내 특구 분할 지정 등) 부여
 - * 상한면적 :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 (인센티브)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거점으로 육성

- (세제지원) 투자재원 마련(양도세) - 투자이행(취득세·재산세) - 경영활동(법인세) 등 기업활동 쏙단계에 인센티브 부여
 - * 이전기업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법인세·취득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 등
- (규제특례) 기존 특례(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에 더해, 지방정부가 규제를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특례*' 제도 도입
 - *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거쳐 해당규제 적용 배제
- (투자활성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3~50%)을 5%p 가산하고, 민간재원 특구펀드에 일정기간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 혜택 적용
 - *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지방이전 등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現 최대 100억원)

□ (창업 활성화)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방정부와 기회발전특구 협력방안 모색

- * 창업자·앵커기업·대학·지원기관 등의 물리적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창업생태계로 창업인프라 집적지역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기획(지방-중앙정부 협업)
-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창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 추진
 - * 지방이전 초격차 스타트업 R&D·바우처 등 우대, 민간 중심의 네트워킹 특화지원 등

2. (가칭)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고교 졸업 후 교육·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유출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업 기준 운영 및 사업별로 분절적인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공교육, 대학진학·취업 여건 개선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으로 지역 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가칭 교육자유특구*) 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청·대학이 협력하여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 지원

* 기본방향 발표(9.14.), 시안 발표(9월말), 공청회(11월초), 시범계획 발표(11월~), 법안 추진('23.下)

◆ 지방 중심으로 상향식 추진 →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지방 공교육 경쟁력 제고

- (유아-초중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위해 지방정부 돌봄 강화,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
- (고교-대학) 지역 고교-지방대 연계 프로그램 강화, 지역인재장학금·지역인재전형 등을 확대하여 지방대에서 역량있는 지역인재 양성

- (지방대 경쟁력 제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대학 지원

- (RISE* 구축)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하여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 '23년 7개 시·도 시범 추진 중 → '25년 전국 시행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추진

◆ RISE체계 도입 발표 이후 지역의 변화

- (지방정부의 대학 투자 확대) 경북은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 고등교육 투자 및 부산은 지산학협력에 5년 간 1.1조원 투입 등 과감한 투자계획 발표
- (지역-대학 소통 활발) 지역 여건에 맞는 RISE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회, TF 및 현장 방문 등 지역별 지자체-대학-기업 간 벽을 허무는 소통 활발

- (글로벌대학)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지역대학 맞춤형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 집중 육성(1교당 총 5년간 약 1천억원)

* ('23)10개 내외 → ('24)10개 내외 → ('25)5개 내외 → ('26)5개 내외 ⇨ 총 30개 내외

◆ 글로벌 신청대학(108개교) 주요 혁신과제

- 학문·학과 간 벽 허물기 : 무학과·무학년제, 융합전공 등 학생 선택권 확대
- 대학-지방정부-산업계 간 벽 허물기 :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지역특화 인재 양성

- (외국인재 유치) 인력 부족 분야에 필요한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정부-지방대-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운영

* 지역 기업·산업 맞춤형 유학생을 지방대에 유치하여 육성하고, 지역기업·업종 매칭 취업 지원

3.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활성화 기반 구축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과 떨어진 외곽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산업·문화 인프라와 접근성이 열악하여 지방에 기업·인재 유치 한계 ■ 부처별 개별 사업 추진시 효과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부처별 각종 지원 프로그램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도심융합특구 개념) 쇠퇴해 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일터)-주(주거)-락(여가) 거점을 복합 개발(예시: 판교 테크노밸리)

- ① (공간조성) 기업 지원공간과 양질의 문화·주거·상업 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 용도·용적률·높이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 ② (입주기업) 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 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 예시: 규제자유특구(중기부), 디지털혁신거점(과기부),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등
- ③ (정주여건)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지원
- ④ (운영·관리)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 설립(예시: 시·도별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설립)

□ (선도사업) 지방 5대 광역시(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를 선정하고 지역별 특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지원

◆ [지역별 선도사업 추진전략(예시)]

- ① (대전) 대전역과 대덕특구를 연결하는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을 구현하고, 민간 및 공공 수요 등을 포함한 명품 랜드마크 구축
- ②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하고 연계해 사업지 내부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특화육성
- ③ (광주) 시청 인근 미개발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기업지원·주거·문화시설 등 확충, 미래차 산단, 인근 AI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AI, 자동차 등 특화산업 육성
- ④ (대구) 舊경북도청 이전지, 삼성창조캠퍼스 및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와 연계한 산업·연구·문화 공간을 복합개발하고,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 ⑤ (울산) KTX역세권, 테크노파크 일원을 상호 연계 복합개발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및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생태계 융복합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 (향후일정)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 조성·지원을 위해 특별법(~'23.下) 및 하위법령 마련(조례 적극활용)하고, 5대 광역시 선도사업 본격 착수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분야 혁신산업 실증구현 R&D 추진(~'26년, 국비 280억원)

4. 로컬리즘(지방다움)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문화 인프라 및 향유 기회의 불균등·획일화 지속 *지역규모별 여가생활만족도 격차 : '22년 9.2%p ■ 진입장벽 낮은 단순창업으로, 소상공인 생존율 저조 및 지역산업으로 발전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여가생활만족도 격차 : '27년까지 5%p 내로 축소 ■ 지역고유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발굴·육성하여 新유형의 지역산업 창출

- (로컬 문화콘텐츠) 7개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특구(도시)' 지정('23.12, 13개소)을 통해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로컬콘텐츠 중심의 지역문화 활성화

* '24년 컨설팅 지원 → '25~'27년 개소당 최대 200억원 지원(지방비 50%)

- | | |
|----------------|------------------------|
| ①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 ②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
| ③문화공간 조성 | ④문화도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

-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 지원('24년 400억원) 및 지역 공연 예술 단체 지원(6개 지방정부, 90억원)으로 지역 예술계 자생력 강화
- 대한민국 문화매력자산 '로컬 100'을 홍보·확산('24년)하고, 위케이션·야간관광 등 특색있는 로컬 여행콘텐츠 개발*로 내수 활성화

* 예시) 지역 숙박 및 체류 시간을 증대할 수 있는 위케이션 프로그램 지원('24년 15개소),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22~'27, 10개소)

- (로컬 창업)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5년간 1천개)

* (사례 : 금풍양조) 강화 금쌀 막걸리 제조, 문화 공간 및 체험 조성을 통해 '100년 양조장'이라는 상품(아이템)으로 강화도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강한 소상공인' 지원(중기부), IP 창출 종합지원사업(특허청), 지역 콘텐츠 기업 육성(문체부) 등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라이콘*으로의 성장 지원

*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제조·서비스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 브랜드) 소상공인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연계·협업을 통해 역사·문화 등 지역 정체성을 담은 상권창업을 촉진하고, 로컬브랜드로 육성(5년간 40개)

- 상인과 로컬크리에이터가 자생적 상권을 형성하고 향후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권기획·교육컨설팅·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사례 : 서퍼비치) 양양 군사지역 해변을 서핑 전용해변으로 조성하여 서핑 교육·축제 등으로 영역 확장('21년 기준 50만명 방문, 매출 30억원) ⇨ '양양 = 서핑' 로컬 브랜드 구축

5.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산업 기업·인프라의 지역편중 ■ 지역은 산업 생산거점 기능에 집중 ■ 전통제조업 산단의 낙후된 환경은 신산업 기업 입주에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비교우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주도 첨단산업 거점 구축 ■ 지역의 혁신거점 기능(인재, 인프라) 강화 ■ 현대적 인프라를 갖춘 첨단신산업 산단

- (첨단전략산업 거점)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 육성

* 15개 국가 첨단산단 신규조성('26년부터 착공),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23.7)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 산업 투자프로젝트(약 550조원 규모)에 **세제·인프라 등*** 범정부 지원

* 인허가 신속처리(60일),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공급

- (산단 제도혁신) 첨단·신산업의 기존 산업단지 입주 확대,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주여건으로의 획기적 개선 등 **30년 만에 산단 제도 혁신**

- (첨단업종 유치) 유연한 산단 관리로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활성화 하고, 투자 지원 확대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주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증설투자시 연접 공장용지(나대지) 임대차 허용, 비수도권 산단 대상 '매각 후 재임대 방식(Sale & Leaseback)'의 자산 유동화 허용 등

- (노후산단 개선) 문화·편의시설 확충하여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전환

- ① 편의시설 확충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 용도전환 가능면적 확대**(3만 → 10만㎡)
 ② 구조고도화 사업의 **면적**(10% → 30%)과 **대상산단**(농공단지, 도시첨단산단 추가) **확대**
 ③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시 **개발이익 추가분 환수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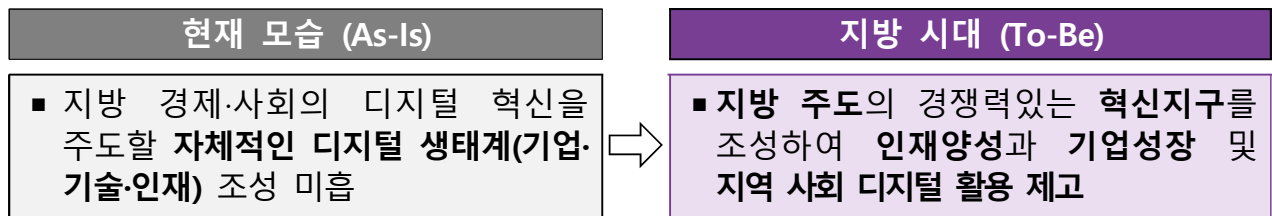
- (지방 과학기술 혁신) 지역별 과학기술기반 발전전략인 「**지역 과학 기술혁신계획**」을 지방 주도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23.8~)

* [지방정부] 집중 육성할 기술분야·거점연구기관 설정 → 신규 핵심사업 추진계획 제시 + [과기부] 계획수립 희망하는 지방정부에 컨설팅 지원, 예산 연계 추진

- **지역 혁신 메가프로젝트** 지원*(시범 '23~'25, 327억원) 및 연구산업 밀집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기술사업화 지원('23~'26, 420억원)

* 이차전지(대구경북), 첨단모빌리티(경남울산), 인공지능(광주전남), 해양바이오(충남), 농생명(전북)

6.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 (혁신지구) 지방에서 창업하여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를 '30년까지 5개 이상 조성 추진'
 - * 시범 추진 :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과감한 지원* 추진
 - * 인프라 구축, 규제 특례, 산·학·연 협력, 정부 R&D, 청년선호 정주환경 제공 등
- (인재양성)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과 산·학 협력을 통해 지방기업 수요와 연계한 '현장형 고속련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 '27년까지 SW중심대학 100개로 확대('22년 44개), 지방 주도로 수립하는 'RISE 계획' 및 '글로벌대학 혁신계획'과 연계하여 전문인력 양성
 - 비학위 고급·전문 교육과정을 확산하여 지방기업 수요 중심의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과기원 부설 AI 영재고 '27년까지 2개 신설
- (강소기업육성) 선도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新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육성
 - * 충청권 AI활용 재난관리, 대구·경북·강원 메타버스 실증, 부울경 정보보호클러스터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디지털 전환서비스(SW) 개발·실증을 통한 전환 촉진, 지역 디지털 서비스 강소기업 100개 이상 육성
 - * 디지털 서비스 보급·활용 제고 : [제조 현장] '30년까지 AI 도입률 30% 이상, [농업] '27년까지 온실·축사 30%의 디지털화 등
- (활용제고) 지방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 및 활용접근성 개선
 - 디지털 배움터(주민센터, 경로당 기반) 교육 고도화 통해 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22년 일반국민의 79% 수준 → '27년 85%)
 - '스마트빌리지*' 등 확산으로 '27년까지 디지털 SOC 300개 이상 신규 확충
 - *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 속 안전 강화, 주민시설 스마트화 등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보급

7.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무계획적 농어촌 공간의 난개발로 도시민의 이주 애로 및 인구유출 확산 ■ 정주여건 미비로 청년·은퇴자 등의 귀농귀촌 수요 대응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지역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공간계획 수립하여 체계적 개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인구소멸 지역에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타운 조성으로 지방이주 수요 타겟 정착 지원

- (농촌공간 재설계)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 지원

* '22년 53개소 → '27년 200개소로 확대, 협약 체결 후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 지원

-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가칭)농어촌 소규모 체험주택” 도입 검토

- (어촌환경 개선) 배후마을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규모·유형별 300개소 지원('23~'30년 3조원)

- ① 경제플랫폼(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개소당 300억원)
- ② 생활플랫폼(어항 자립형, 개소당 100억원)
- ③ 안전 인프라(소규모 어촌시설 확충, 개소당 50억원)

- (청년 농·어업인 육성) 청년의 농어업분야 취업·창업 촉진을 지원

- 청년 농어업인 대상으로 자금, 기술교육, 농지·어선 임대 등을 연계 지원해 안정적 농어업 정착 지원('27년 청년농업인 3만명, 청년어업인 2천명)

* [농어업] 청년농어업인 월 최대 110만원(최장 3년간) 지원, [농업]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7, 15개소), [어업] 청년 어선 및 양식장 임대사업(임대료의 50% 국비 지원)

- 빈집·폐시설·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 방문 유도 및 생활인구 유입 연계사업* 지원('24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9곳 선정, 3년간 국비 450억원)

* 예시) 향토기업·대학 등 민간참여 취미형 창업연계시설(수제맥주, 공방), 워케이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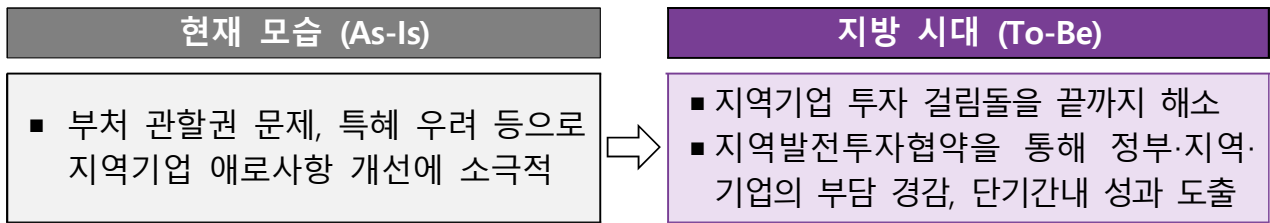
- (지역활력타운) 인구소멸지역에 은퇴자·귀농청년 등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 조성

* [주거]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돌봄·체육 등 생활인프라를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연계 지원 등

- '23년 시범사업지역(예산, 청도 등 7곳)을 선정하여 지역수요·특성을 살린 활력타운 조성지원(지방정부-7개부처 협약체결, '23.10월)

- ◆ 지역활력타운 사례(예산군) : 청년상인 등 취창업자를 위한 전용 주거(청년 레지던스) 지원, 버스승강장 조성 및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 등 통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도모

8. 지방 킬러규제의 속도감 있는 일괄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 (규제 일괄해소) 지역 이전기업 및 투자 희망기업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 투자기업 규제애로 해결사례

포스코는 광양 제철소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생산 신규 투자를 희망하였으나, 철강 관련 업종만 입지 가능 ⇒ [개선]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 가능 업종을 확대하여 포스코가 광양에 4.4조원 투자 결정

○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지역 현장의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기업애로 해결 역량도 강화

* 예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아다니는 '규제사냥단'(전남), 1주 1기업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현장기동반'(경남) 등 활용

□ (상향식기업참여 협약) 희망지역의 경우,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규제개선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규제 발굴 후 개선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검토과정에서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위한 규제개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해 불편 호소

< 지역발전투자협약 개선 사항 >

※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다부처·다년도 사업 계획 수립후 지자체-중앙부처간 협약을 통해 사업 공동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31조)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신규) 기업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	· 지자체 주도 상향식	· 기업-지방정부 주도 상향식
협약	· 지자체 - 중앙부처(주관부처, 협조부처)	· 민간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행안부 등)
절차	· 균형위 공모사업(지자체가 다부처 묶음 사업으로 신청, 주관부처 섭외 등)	· 지역 내 규제발굴 체계 및 민관합동 규제협의체를 활용한 킬러규제 발굴·개선
지원 내용	· 각 사업당 국비 91억원 지원	· 현장중심 규제개선 추진
분야	· 삶의 질, 공간혁신, 일자리 분야에 한정	· 지원분야 제한 없음(중앙주도의 하향식·일괄 지원이 아닌 상향식·타겟 중심 추진)

□ (향후계획)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규제 개선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규제개선 추진

* 개선과제 발굴(10월) → 규제개선 결정(~12월) (*협약체결시 지방시대추진 심의)

9.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현재 모습 (As-Is)	지방 시대 (To-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주도의 국정운영체제 ■ 자치단체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제 개별 대응으로 한계 ■ 권한 확대 요구에 비해 책임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 재조정으로 지방주도권 강화 ■ 권한 확대로 지방 특화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간 유연한 공동 대응 ■ 지방의 책임성 및 역량 강화

- (과감한 권한이양)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자치조직권* 및 지역개발 관련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23~)
 - * 예시) 지방 기구 설치 자율성 확대, 각종 행안부 협의 규정 폐지
 - 지방-특별지방행정기관 간 중복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정비 추진
-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주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장치 확보
 - 지특회계 재원 규모 및 포괄보조금 성격인 지역자율계정 비중 확대, 조례로 지방세 감면 가능한 허용범위 개선*(「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 (現) 서민생활 지원 등 제한적 허용 → (개선) 「지방자치법」상 쏠 자치사무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 검토
- (자치모델 마련)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 고도화, 지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 발굴·부여
 - *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미래산업글로벌도시, (전북)글로벌생명경제도시
 - 메가시티·광역경제권을 지원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책임성·전문성 강화) 지방의 책임성 장치 마련을 위해 지방 감사 기구의 기능 제고,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 지방정부의 감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경영의 책임성 확보
 - 중앙-시·도-시·군·구 간 인사교류 확대 및 맞춤형 교육제도 마련(“23~)

Ⅲ.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지방시대 5년 후 미래상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납니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됩니다**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52% 유지

지역혁신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 30개교 육성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합니다**

귀농·귀어·귀촌 인구
45만 확보

체류형 생활인구
늘리기